당정, 최고세율 인상 등 8월 2일 발표

고용 증대 세제 신설 · 일자리 향상 세액 공제 확대 · 영세 자영업자 체납세금 면제 · 근로장려금 인상 등 합의

당정이 고용을 증가시키거나 질을 향상시킨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체납세금을 면제해주고 저소득자 소득증대 차원에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도 인상할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평소 당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과 중산층, 영세 자영업제의 세 부담을 줄이는 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당정은)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증가시키는 등 일자리를 향상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김 의장은 "소득 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 세 부담 강화하되 서민, 중산층,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면서 저소득가구 소득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지원금)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영세음식업자에 대한 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역사 왜곡 영상 감상문 요구 전주기전대 규탄"

27일 전주 기전대 앞에서 전북 68개 단체가 모여 최근 기전대가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역사 왜곡 동영상 감상문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당정은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발표하기로 했다. 단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자본소득 과세도 논의됐다.

김 의장은 "2016년 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고소득자 세 부담을 우선시하고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8월2일 발표할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세법 개정안과 대선 공약을 충실히 반영해 이행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성장, 양극화 극복, 상생 협력에 기반 둔 포용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정의를 위해 세부담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필요하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며 "기본적으로 정부는 당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해 세율 인상에 대한 정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검사장 승진 최소화… '법무부 탈검찰화' 가시권

고검장 · 검사장급 36명 승진 · 전보 인사… 법무실장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탈검찰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뇌부를 대거 교체했다. 인적쇄신보다는 공석을 채우는 수준에서 검사장 승진을 최소화 하는 등 다소 안정적인 인사 기조를 보였다는 평가다. 다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무부 탈검찰화라는 메세지는 분명히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8월1일자로 조은석(52·사법연수원 19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임명하는 등 고검장·검사장급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월호 해경 수사 조은석, 서울고검장

우선 조은석 신임 서울고검장 임명은 과거 정권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검사를 중용하는 새정부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고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와 이견을 보인바 있다. 조 고검장은 당시 수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반대하는 법무부로부터 상당한 외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고검장은 동기가 있었던 청주지검장으로 발령이 나고, 이후 다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되는 등 일선 수사에서 배제됐다.

또 이번 인사의 특징은 고검장급에 사법연수원 20기가 진입한 것을 들 수 있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6명 뿐인 사법연수원 19기 검사장 중 상당수가 고검장급으로 승진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실제 인사에서는 2명만 승진했다.

대신 이 자리에는 20기가 발탁됐다. 부산고검장에 박정식((56·2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광주고검장에 김호철(50·20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각각 임명됐고, 법무연수원장에는 김오수(54·20기)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이 자리 잡았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손발을 맞춰 검찰개혁을 추진할 인사들도 눈에 띈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차경환(48·22기)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발탁됐다. 문 총장의 최측근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설계, 보좌할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부장에는 김우현(50·22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임명됐다. 김 반부패부장은 새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관련 사정의지를 실현할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새 검사장 12명, '무난한 승진'… 법무부, 탈검찰화

관심을 모았던 검사장 승진은 예상보다 폭이 줄었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공석인 14자리 이상에 대해 검사장 승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지만, '법무부 탈검찰화'와 맞물려 12명 승진에 그쳤다.

기존에 검사들이 맡아오던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이번 인사에서 검사를 보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는 이후 인사에서 민간전문가나 일반 공무원이 임명될 것으로 보여 법무부 탈검찰화 작업이 가시화됐다.

또 당초 24기 일부까지 검사장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직의 안정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사장 승진자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인물들은 서울중앙지검 이동열(51·22기) 3차장, 이정회(51·23기) 2차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차장은 '승진코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동열 3차장은 통상 검사장 승진자 초임지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옮겼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동기인 이정회 2차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게 됐다.

이에 대해 한 서초동 변호사는 "이번 인사를 보면 윤석열 지검장 임명 때처럼 놀랄만한 파격이 보이진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안정을 추구했다는 느낌이지만 정권의 기조는 분명히 반영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시군의장협, 시외버스 운임 제도 개선 건의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현행 시외버스 운임 요율 체계가 불합리하다며 시외버스 요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7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29차 월례회의에서 '시외버스 운임 요율 산정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의 운임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시외버스 운행 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에 따라 일반국도 및 고속국도별 운임 요율과 실제 운행거리, 경사에 따른 할증으로 산정되고 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현재 고속국도(62.35원/km)와 유사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운임 요율이 일반국도(116.14원/km)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도로 개선 사업으로 운행 거리가 단축되거나 경사도가 완화되고 있음에도 시외버스 요금은 인하되기는 커녕 오히려 인상됐다며 자동차 전용도로 운임 요율을 일반국도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훈령을 이른 시일 내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개헌 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 맨 앞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해당 부처 장관 및 각 정당 대표 등에 보낼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이낙연 총리 "사업용 차량 추돌방지장치 부착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버스나 대형트럭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으로 발생하는 대형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교통정책은 사람 중심의 사회라는 철학에 따라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졸음운전 방지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충분치 않아 대형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이 바로 엊그제의 일"이라며 "과학적으로 접근해 추돌방지장치 부착, 특히 운수업종은 근로시간 제한 예외 업종을 두지 않고 쉬는 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이런 대책이 비용이 들고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 교통문화 후진국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며 "모든 부문에서 안전한 나라라는 위상을 확고히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민주당 완주무진장 지역위, 사무국장 전격 경질

더불어민주당 전북완주 무진장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전격 경질됐다.

신임 사무국장에는 완주군의회 의장을 지낸 김용찬 전 군의원이 맡았다.

27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전북 완주무진장 지역위원회는 유준열 사무국장을 경질했다고 지난 20일 전북도당에 보고했다.

전북도당과 완주무진장 민주당 당원들은 유 국장에 대해 단행된 5개월만의 경질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최근 내부 고발(도선관위에 지난 5월 내부 고발장이 접수됨)로 진행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와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완주무진장 지역위원회는 신임 사무국장에 김용찬 전 완주군의원을 임명했다.

완주무진장 지역위 고위 관계자는 "김 전 군의원의 경우 일단 사무국장 대행 체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